

보도참고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09. 10. 8(목) 배포시		
배포일시	2009. 10. 8(목) 15:30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재정집행관리팀
담당과장	윤정식(2150-5450)	담당자	임대한 사무관(2150-5453)

제목: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, 민간 실집행을 94.3%

- 상반기 조기집행 167.1조원중 157.5조원이 최종적으로 민간부문에 지출
- 민간 실집행 연간 진도율은 61.1%, 상반기 목표 60.6%를 0.5%p(1.4조원) 초과 달성

- 국회 예산정책처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실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발표('09.10.7)하여 국민일보가 보도(10.8)
- 정부는 '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본격화된 세계적인 경제·금융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 편성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상저하고(上底下高)의 경기전망에 따른 경기보완을 위해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함.
- 상반기 중 본예산 257.7조원 중 64.8%인 167.1조원을 집행하여 당초목표 60.6%인 157.5조원 대비 4.2%p(11조원)을 초과 집행함.

< '09.6월말 재정집행 실적 >

(조원, %, 누적)

구분	'09 계획(A)	'09.6월말			연간 진도율	
		계획 (B)	실적 (C)	집행률 (C/B)	'09.월 (C/A)	'08.6월
주요사업비	257.7	156.1	167.1	107.0	64.8	49.5
▪ 예산	170.1	102.5	110.9	108.2	65.2	50.2
▪ 기금	30.5	19.0	17.9	94.0	58.6	44.9
▪ 공공기관	57.1	34.6	38.3	110.7	67.1	50.4

- 1] 40개 부처 예산, 39개 기금, 25개 공기업의 주요사업비(6,104개 사업)
- 2] 상반기 계획 미달기관(9개) : 문체부, 농식품부, 국세청, 법제처, 인권위 등

- 민간 실집행율은 중앙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(d-Brain)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연계하여 '09.6월부터 집계 하고 있는 바,
 - 상반기 조기집행액 167.1조원중 **94.3%**인 **157.5조원**이 최종적으로 민간부문에 지출되었으며, 이는 **상반기 집행목표 156.1조원**를 **1.4조원 초과**한 것으로 연간진도율도 **61.6%**로 상반기 목표 **60.6%**를 상회한 것임
-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실적을 집중 관리함에 따라 실집행율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다음의 사유로 부분적인 차이가 발생함.
 -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지원된 자금중 일부사업의 집행이 **설계 변경, 보상협의 및 법정절차 이행**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,
 - 지자체 · 공공기관에 대한 국고지원 시점과 현장 실집행 시점간에는 일정기간 **시간차(Time-lag)**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임
- 국회 예산정책처가 10.7일 발표한 실집행율 통계는 정부가 집행관리하는 40개 부처, **6,147개 사업**중 극히 일부인 **446개(7.2%)** 사업만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며,
 - 특히, **실집행율이 70% 이하인 사업**만을 대상으로 **자의적으로 분석 대상**을 설정함으로써 분석범위와 집행률 수치가 **대표성**을 갖기 어려움.
-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달성한 성과에 대해서는 국내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음
 - 1/4, 2/4분기 재정의 성장기여도는 각각 **1.8%, 1.9%**로 나타남.(한국은행)
 - IMF,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도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

- 또한 정부는 집행된 재정자금이 민간에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음.
- **매월 2회**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, 공기업 임원이 참여하는 **재정집행특별점검단회의**를 개최하여 집행상황을 점검하고,
 - 조기집행 절차간소화 등 **집행촉진을 위해 126건의 제도**를 개선하였으며,
 - 각 부처 및 공기업 등 104개 조기집행 참여기관은 **총 1,389회의 현장점검**을 통해 예산 낭비없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.

기획재정부 대변인